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07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8년 6월 1일
- 라. 회부일자 : 2018년 6월 11일

## 2. 제안이유

- 시책 추진 책임성 강화 및 역량집중을 위해 관련 사무를 해당 실국의 소관사무로 명시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남북교류협력 관련 총괄·조정 기능을 기획조정실 소관사무로 명시

####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남북관계 개선 기대에 따른 남북협력 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해 해당 사무를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현황

- 서울시(이하 “시”)는 4·27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에 따라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지방 정부 중심의 남북교류 활성화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
- 시는 그 동안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설치한 2004년 이후에는 매년 인도적 지원사업을 비롯한 각종 남북교류사업을 추진·지원하였음.
- 하지만,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조치가 장기화 되면서 학술교류 사업을 포함한 제한된 사업이외에 남북교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현황〉

연도	예산집행액 (백만원)	주요사업
2015	324	- 개성공단 입주기업 재활용자전거 지원 - 6·15 남북정상회담 15주년 기념 학술회의 지원 등
2016	644	- 서울-평양 도시계획분야 도시교류 기초연구용역 -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행사 지원
2017	1,907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 2017 통일테마전 지원
2018 (5.23기준)	1,011	-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기원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 지원 -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 2018년에는 새 정부 출범이후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면서 7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1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 〈2018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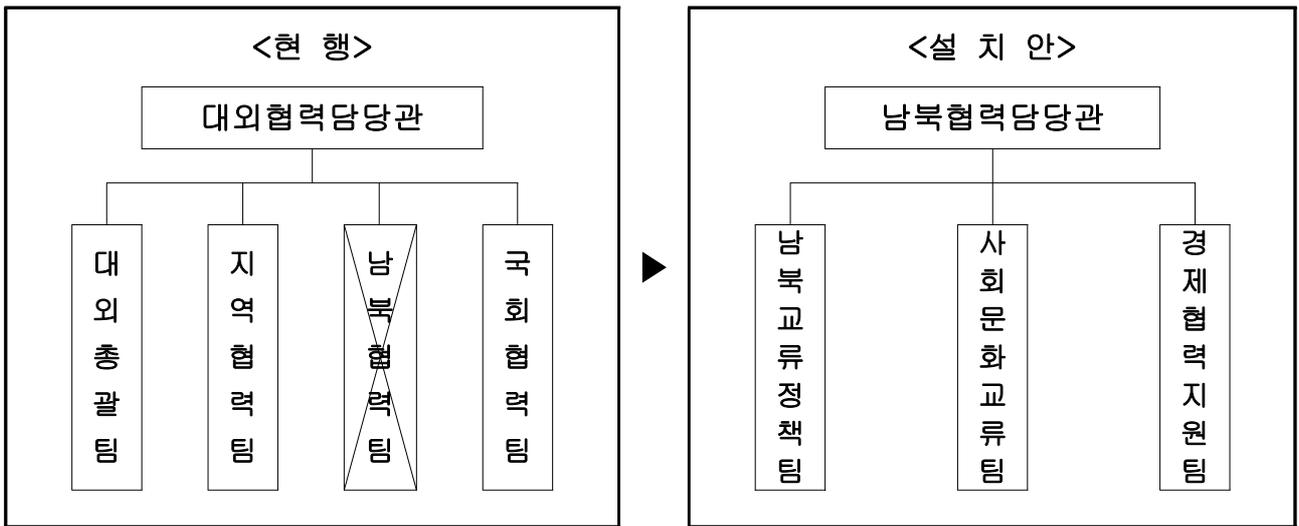
분 야	세 부 전 략	예산액 (백만원)	주요사업
통일기반 조성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 3.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교육 사업 : 1.5억원</li> <li>- 시민공감대 확산 사업 : 2억원</li> </ul> </li> <li>▣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 2억원</li> </ul>
	남북교류 관련 자원 발굴·관리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교류 기념표식 설치사업 : 1억원</li> <li>▣ 서울시 남북교류 백서 발간사업 : 0.5억원</li> <li>▣ 평화·통일 체험관 운영 : 1.5억원</li> </ul>
	공무원 평화·통일 공감 강화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0.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국내·국외 통일교육 등</li> </ul> </li> </ul>
유관기관 협력	대외 네트워크 구축 강화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학술 및 소통 채널 운영 : 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15선언 및 10·4선언 기념 학술회의 공동주최</li> <li>- 정부·지자체·민간단체·국제기구 참여 포럼·세미나 개최</li> </ul> </li> </ul>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1억원</li> <li>-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 정기 워크숍 등</li> </ul>
남북 도시교류	서울-평양 도시교류 기반 마련	3,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사업 추진 : 37억원</li> <li>- 도시인프라 협력 및 경제협력 : 36.5억원</li> <li>-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 0.5억원</li> </ul>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사업 공동 추진 : 20억원</li> <li>- 인도적지원, 개발협력, 사회문화교류 등</li> </ul>

#### 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무 소관 지정 (안 제5조)

- 시는 남북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향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정부 중심의 특성화된 각종 협력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실제 시는 지난 5월 서울-평양간 포괄적 도시협력 추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선도를 목표로 설정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단계에 걸쳐 16개 각종 사업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안 제5조제6호를 신설하고 기획조정실 분장사무에 ‘남북교류협력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 조례안 개정이후 시는 현재 대외협력담당관내 ‘남북협력팀’을 확대 개편해 ‘남북협력정책팀’을 포함한 3개팀 12명 규모의 ‘남북협력 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임.

## 〈남북협력담당관(4급) 신설 계획(안)〉



-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현재 약 166억원 규모로 조성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장기적으로는 1,000억원 까지 확대·조성할 예정임.
- 최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이후 북미간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등 남북간의 협력과 교류를 위한 대내외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해 가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교류 모델로서 서울-평양간 포괄적인 도시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의 정책 방향은 적절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교류 활성화를 원하는 시민의 요구에도 부합한다고 평가됨.
- 다만, 현재 남북교류협력 혹은 서울-평양간 도시협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이 불확실하고, 남북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동성이 강한 특정업무 추진을 위해 담당관을 신설하는 문제는 사업의 지속성 여부나 조직관리 효율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해 현재 경기도가 남북교류 사업을 위해 3개팀 17명 규모의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인천시는 현재 각각 2개팀과 1개팀 규모로 운영중인 전담조직을 지방선거 이후 '남북(교류)협력담당관'으로 확대·신설할 계획임.
- 하지만,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북한지역과 지리적으로 직접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 상황과 직접 비교가 곤란한 사정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과(課)” 단위의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의 인력과 시·도의 경우 ‘5급 4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 ④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 이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대외협력담당관 4개 팀이 3개 팀으로 축소되고, 이 중 남북협력팀이 확대되어 남북협력담당관으로 신설될 경우 대외협력담당관과 남북협력담당관 모두 3개 팀으로만 운영되어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임.
- 기구의 신설은 해당 조직이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은 물론이고, 조직이나 기구의 설치 요건을 정한 관계 법령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참고자료>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